

# “아스콘공장 인근 주민 피해 클 듯”

###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 암 발병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성경찬 도의원, 환경녹지국 행감서 “대책 마련해야” 주장

아스콘공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를 깔 때 쓰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아스콘’은 공장에서 만들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을 내뿜는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만 했을 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성경찬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학생, 노인 등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전북도 아스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 우려 상황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아스콘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남발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현재의 아스콘 공장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아스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질병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전북 남원시 내기마을의 경우 40여명의 주민들 중 15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익산 장점마을은 피부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0배 정도 높게 나왔다.

성 의원은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잡으려면 조속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책임은 전북도 행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스



콘 공장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전북도청은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이들로 인한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스콘 공장등과 근거리에 있고 산단 주변 등 지리적 인접성, ▲해당 사업장 규모 및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 순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외부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정기 진단 및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 정밀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 남원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아스콘 공장 가동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및 다환방향족화합물(PAHs)이 공장 미 가동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암발생 상관성이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13일 새만금을 찾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당정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 도의회 교육위 “도내 교육현장 교육목표 달성해야”

###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서인력 증원 등 주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3일 전북도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안전,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지난 9월 집중적으로 발생한 도내 식중독사건과 관련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건의 보상 등을 더욱 더 관심갖고 이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비만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학생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체육활

동 여건을 만들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사서교사와 관련해 “사서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면서 “전국은 43%인 반면, 전북은 9.3%로 사서인력 증원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침해받고 있는 교권에 대해 “학생들은 방과후·학원 등으로 인해 교사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존경받는 교사·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식(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관련 테마형 체험학습 개발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북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를 갖고 체험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함에도,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복사·수정해 자료집을 만들었다는 것에 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체험학습 자료를 살펴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떻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정보자료를 버젓이 1

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의문스럽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획일적이며 경직된 학교 교육현장에 대해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상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에 “학교시설 개방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이는 교장의 재량이지만 국가 정책 방향이 있음에도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는 교육현장의 행태”라면서 “도서관은 학생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유치원 3법” 시간 끌기... 로비 있었다

### 민주 박용진 의원 한국당 향해 비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체계상 문제가 많다, 또는 이 법이 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발목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우리도 법을 낼 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비슷한 법안이 있으면 병합 심사한다. 그런데 우리도 만들 테니 기다려 달라 하고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유치원 운영에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분들은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권 보장을 이야기한다.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경기를 방해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당이) 어딘가로부터 압력, 로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로비는 분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러이러한 악영향을 낳겠다가 아니라 이 법이 도입되면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반대의 축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바로 한유총 측”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축구 경기로 치면 참대 축구, 시간 끌기, 경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 여론이 찾아 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의 관심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여론의 관심도 다른 데로 가는 반면 한유총은 팔팔 뭉쳐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다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19일) 정도에 다시 이야기해서 끝장을 보자고 얘기했다”며 “한국당 의원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

## 정동영 “국토부, 비주택 거주자 안전보장책 마련을”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서울시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제2, 제3의 국일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37만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대주택을 1년에 2천호 공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마중사업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정작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반대가 많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현재 37만 가구에 이르는데 매입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